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의 권리가 다른 종류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 등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이나 원재료인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에 관한 것인지, 수입한 부분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나) '상표권'의 경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다목이나 제2호와 달리, '부분품', '구성요소'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구 관세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의 '수입물품'을 '완제품' 또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② 상표권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점, ③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점(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허여된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에는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